

가톨릭, 낙태반대운동 본격나서

종교적 원칙론 넘어 현실적 대안까지 모색

가톨릭계가 낙태반대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13일부터 시작되는 '낙태허용법 입법 폐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발로 본격 가동되는 이 낙태반대운동은 종교적 원칙론만을 주장해왔던 지금까지의 반대운동과 달리, 낙태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관심을 갖고 다른 사회단체와 연대활동을 모색한다는 데서 변화된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

65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지속적으로 견지된, 낙태에 대한 가톨릭의 공식입장은 전면반대이다. 전세계 주교들이 모여 교리를 결정하는 바티칸공의회는 사목헌장 51항은 "생명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보호해야 한다. 낙태는 가장할 죄악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8일 인권의 날에 맞춰 발표한 한국천주교 주교단 사목교서에서도 낙태는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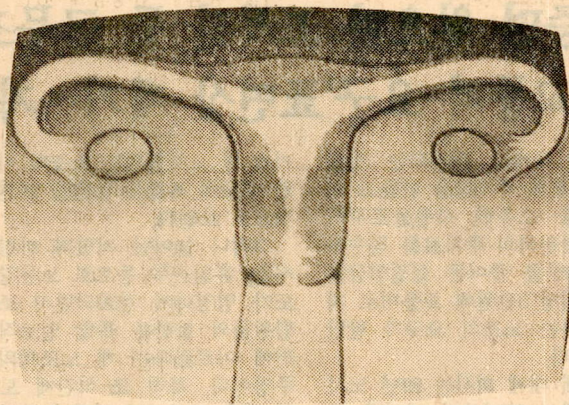
미혼모 수용시설 확대촉구

이러한 신앙적 근거에 기초해, 가톨릭쪽은 지난 4월 법무부 형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 등에 개별요를 통해 입법추진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천주교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는 5월22일 낙태죄와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해 1백만 이상의 낙태가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 이런 원칙론적 주장은 일과성 선언에 그치고 마는 게 사실이다.

보사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올해 펴낸 '가족보건사업평가 및 인구정책'이란 연구서에 따르면 91년 결혼한 여자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조차 54%에 이른다. 또 주기조절법 외에는 피임조차도 반대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일부가 낙태를 행하고 있음을 가톨릭관계자들도 시인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천주교 중앙협



마리아수녀회에서 지난 84년부터 8만개 이상 제작·보급한 피임법 비디오테이프 장면. 가톨릭은 낙태반대운동을 시작하며 이와 같은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허용입법폐지 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성교육 적극도입 등 방지책 마련키로

의회(주교회의)는 72년 제정된 모자보건법 폐지주장 등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원칙적 선언과 함께, 낙태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를 강조하면서 이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데도 이번 반대운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협의회는 이번 낙태허용조항 반대운동 과정에서 우선 육아부담을 정부와 사회단체가 공유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탁아소의 증설과 미혼모 수용시설의 확대를 촉구하고, 또 피임법에 대한 무지나 오해 그리고 왜곡된 성지식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교회에서 소극적으로 가져왔던 성교육을 외국의 성교육 사례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산부인과 병원이 경제적 이유로 낙태시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해 의료수가를 조정하도록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국가 인구정책의 재검토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협의회는 이를 위해 9월께 사회단체와 공동연대해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열어 낙태방지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톨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단지 낙태에 대한 보수적 견해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있다.

"사회적 배경 무시"비판도

일부 여성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낙태문제는 인명경시풍조를 단순히 개탄하는 데서 벗어나 '왜 여성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회적 배경에 관심을 둘 때만이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태아에 대한 결정권은 사회나 윤리적 이념이 아니라 부모 등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치 않은 임신을 통해 아이를 낳았을 때 본인이나 가정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보장제도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에선 낙태의 전면적 금지선언은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또다른 억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무분별한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는 우려를 보이고 있고 육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문제 등에선 가톨릭과 공동의견을 갖고 있어, 낙태문제를 둘러싼 사회보장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들 종교·사회단체간에 활발히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3일 서울 능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서명운동 선포식엔 김수환 추기경과 주교회의 의장 김남수 주교 그리고 각 교구 대표 및 수도회 평신도 대표들을 비롯해 김대중 민주당 대표 등 정계 신자들이 참여해 성명을 발표하고, 우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인식 기자〉